
2024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

2023. 12.



해양수산부

목 차

I . 수립 배경	1
II .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	2
III . 2024년 여건과 전망	6
IV . 2024년 시행계획 추진방향	7
V . 2024년 세부 시행계획	8
1. TAC(총허용어획량) 기반 자원관리	8
2. 수산자원의 회복	9
3. 수산자원 조사 · 평가	10
4. 연근해 서식 · 생태환경 개선	11
5.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문화 확산	12
VI . 투·융자 계획	14

I. 수립 배경

□ 수립 배경

- 변화된 어업환경을 고려하여, 수산자원 관리를 개선·발전시키기 위해 5년 단위 「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*」을 수립·추진중

*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동·서·남해와 제주 부근해역(내수면 제외)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 기본방향, 자원조사·평가체제, 수산자원 회복계획, TAC 등에 대한 계획 수립

- 「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(‘21~’25)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'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(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8조제1항)

□ 「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」 주요 내용

-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,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주요과제, 13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

- TAC(총허용어획량)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,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 등 TAC에 기반한 수산자원 회복·관리 정책 추진
- 개별 어종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수산자원 조사·평가 체계를 확립하고, 연근해 서식·생태 환경을 조성
- 민간의 자율과 참여가 함께하는 수산자원 정책 추진

< 추진과제 : 5개 주요 추진과제, 13개 세부 추진과제 >

주요 추진과제 (5개)		세부 추진과제 (13개)	
1	TAC 기반 자원관리	① TAC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	②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
2	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	① 감소·고갈 어종 단계적 맞춤형 관리	②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		③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	
3	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	① 생태계기반 자원평가 활성화	②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
4	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① 생태계 기반 산란·서식장 조성	②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
		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관리 합리화	
5	참여형 수산자원 보호문화 확산	①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레저문화 확립	②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		③ 자율관리형 수산자원보호 촉진	

Ⅱ.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

1 주요 성과

① '산출량 중심' 어업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TAC 확대

- (TAC 확대) 참홍어 TAC 업종(근해자망 추가)과 적용해역(전남·인천일부 → 서해전역) 확대, 바지락 TAC 적용해역(경남거제 → 경남전역) 확대
 - * TAC 정책의 수용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소통 강화('23년 설명회 21회)
- (생산량 증가) 바지락(96.2% ↑), 고등어(65.3% ↑), 삼치(52.9% ↑) 등 주요 TAC 적용어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96.2% 증가



② 60년 만에 국내 유일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구역 해제

- 곰소만·금강하구 일대에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(4.1~10.31) 규제가 설정되어 어업인 불편 가중
- 수산자원조사('20~'22) 결과 주요 산란·서식장과 자원량이 비슷해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, 포획채취 금지구역*을 전면 해제('23.11.)

* 곰소만('64.1.1/9,820ha), 금강하구('76.9.7/11,280ha)



-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(어선 3,061척)의 안정적인 어업이익(94억원) 보장 및 조업구역 확대(183km²)를 통한 지역 어업의 활성화 도모

3 바다숲 및 산란·서식장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기여

○ (생태계 복원) 바다 생태계의 먹이 공급처이자 은신처, 산란장 기능을 하는 바다숲 17개소(25.4km², 누적 317.2km²) 추가 조성

* 바다숲 조성면적(누적, km²): ⁽¹⁷⁾152.5 → ⁽¹⁹⁾214.9 → ⁽²¹⁾266.4 → ⁽²³⁾317.2

- 바다숲 조성을 통해 갯녹음이 해소(조성 전 대비 △46.1%)되고 있으며, 최근 5년간 평균 해조류 생체량 94.5%, 종다양성은 17.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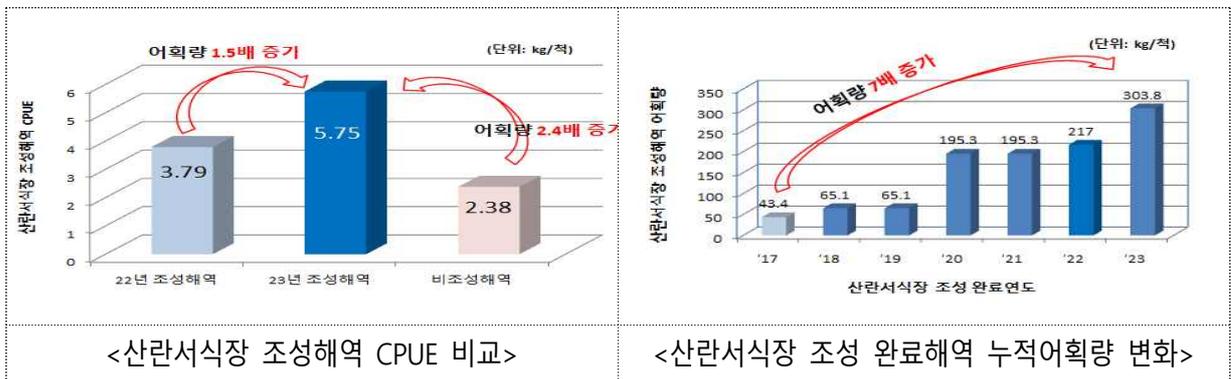


○ (민간투자 활성화)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민간기업과 바다숲 블루카본 조성 업무협약(MOU) 체결 및 민간자본 투자 유치

* ('23.5.10) 현대차(20억원), 효성그룹(6.5억원)



○ (수산자원 회복) 해역별 특화품종의 산란·서식장 조성으로 단위 노력당어획량(CPUE)은 전년 대비 51.7%, 비조성해역 대비 141.6% 증대



* 산란·서식장 CPUE 실적(kg/척): ('22) 3.79kg → ('23) 5.75(1.5배 증가)

** ('17~'23년) 평균 CPUE 실적(kg/척): 조성해역 21.7, 비조성해역 2.38

*** 산란·서식장 완료해역(누적): ('17) 2, ('18~'19) 3, ('20~'21) 9, ('22) 10, ('23) 14

4 소비자·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'어린 오징어' 유통 117% 감소

- 어린 오징어를 '총알오징어'라 부르며 소비하는 실태 등으로 인해 어린이 체험교육, 대국민 워크숍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캠페인 추진
 - *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오징어 포획은 불법이나, 과거 소비자 수요로 생산·유통
- 한국소비자연맹의 어린물고기 판매실태(온라인마켓) 조사 결과 '어린 오징어(총알오징어)의 판매 비율이 '20년 66.7%에서 올해 30.8%로 큰 폭으로 감소
 - * 총알오징어 판매 업체 비율: ('20)66.7% → ('21)40.7 → ('22)42.3 → ('23)30.8

5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관리 강화

- 일반국민의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보장하고,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「수산자원관리법」 개정('23.12.21 시행)
 - *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,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 근거 마련
- 정책대상자(어업인, 일반국민, 동호회)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,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
 - * (어업인) 수협 홍보매체 활용하여 어촌계 대상 교육, (동호회) 주요 동호회 대상 현장간담회, (일반국민) 공익광고(KTX), 유튜브 활용 콘텐츠, 공모전 등

6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조성

- (안전사고 예방) 특별안전관리기간 운영과 계절별 맞춤형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건수 감소
 - * (사고건수) '20(301척) → '21(294척) → '22(280척)
- (대국민 낚시행사) 가족사랑 낚시대회와 어린이 낚시안전 체험교실 동시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 활성화와 낚시 인식변화 도모
 - * 4.9 / 충남 공주 / 193팀 386명 참가 / 10명 시상 및 장관상 등 수여
- (국가승인통계) 낚시어선 어획량 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*에 따라, 낚시어선 TAC 등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 확보 중
 - * 「통계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통계청장 승인('22.12)

2 주요 평가 및 보완사항

1 수산자원관리 제도의 수용성 확보 필요

- (형평성) 동일한 자원을 이용함에도 일부 해역과 업종에만 TAC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실효성이 저해되고 형평성 문제 우려
 - * (예시) 꽃게는 서해 전 해역에서 조업되나, 현재 서해 특정해역에서만 TAC 적용
 - 효과적인 자원관리 등을 위해 TAC 적용해역, 업종 등을 지속 확대하고, 중장기적으로 전체 연근해어선의 TAC 관리 필요
- (중복 규제) TAC 중심으로 자원관리를 전환 중이나 기존 금어기·금지체장 등의 규제는 유지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지속 요구
 - * TAC와 금어기·금지체장 중복적용 12개 어종

2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사업 추진 필요

- (TAC) 참여 어선은 확대('21, 1,450 → '23, 3,585척)되었으나, 조사원 확충 지연 등 어획량 관리가 어렵고, 참여어업인 정책지원 확대 필요
- (자원 조사·평가) 자원평가 정확도가 낮고('23년 평가대상 65종 중 5단계 추정방법* 27종), 자원평가의 투명성·신뢰성에 대한 외부 비판 제기
 - * 5단계 산출방법은 연도별 어획량만을 사용하는 자원평가로 정확도가 가장 낮은 추정방법
- (자원조성) 자원조성사업(국가)과 사후관리(지자체) 주체의 이원화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, 사후관리 부재로 기능 및 효과 유지가 곤란
- (자율관리어업) 초기 자율관리어업은 양적 성장 위주의 노력으로 '15년 이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에 한계 발생
 - * ('01) 63개소 → ('11) 932개소 → ('15) 1,131개소 → ('23.10) 1,128개소

3 어업인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 심화

- 해루질, 수상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(레저인)과 어업인간의 갈등*, 낚시 조획량 및 쓰레기 증가로 낚시인과 어업인간 갈등** 심화
 - * 제주 관내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를 제한(제주도 고시, '21.4)
 - ** 국립공원공단에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여수 거문도 갯바위 출입통제('21.9~'22.10)

Ⅲ. 2024년 여건과 전망

① 감소하는 수산자원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해양 기후변화

- 해양 기후변화,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인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'00년대 116만톤에서 '20년대 92만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*

* **평균 어획량(만톤)** : ('00년대) 116만톤 → ('10년대) 104 → ('20년대) 92
'19년 어획량 91만톤은 최대 어획량(173만톤)을 기록했던 '86년에 비해 47.4% 감소

- 우리 바다는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*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,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 모색 필요

* **(표층수온)** '68~'22 1.36°C ↑(세계 평균 0.52°C) **(해수면)** '71~'06 2.56mm/yr ↑(세계 평균 2.36mm/yr)

② 그린전환, UN SDG 등 국제사회 정세 대응

- 세계 주요국의 그린전환 정책*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'2050 탄소 중립 선언', '녹색성장 5개년 계획' 등의 주요 정책과 연계 필요

* **(EU)** '유럽 그린딜 탄소누출을 통상이슈로 설정 **(미국)** 'IRA'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

- UN은 '2030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'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중요성 부각

* UN SDGs 14번 목표 : 해양과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

③ “115년만의 대전환”, 산출량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변혁 추진

- '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' 수립('23.10)에 따라 정확한 MCS* 체계를 기반으로 어업관리정책을 TAC 중심으로 전면 개편 추진

*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(감시감독체계) : 어선의 위치, 어획정보, 양륙정보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과학적 어업관리정책의 기반자료로 활용

- 전체 연근해어선에 TAC 적용('27. 이후)을 위해 TAC 확대와 더불어 TAC 배분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ITQ* 제도 도입 검토

*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(양도성개별할당제) : 어업인에게 개별 TAC 한도량을 할당하고,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시장경제에 따라 거래가능토록 하는 제도

IV. 2024년 시행계획 추진방향

비 전	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·이용
24년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비율(%) : (’20) 35 → (’23) 40 → (’24) 50 → (’27년 이후) 100 ■ 수산자원관리 체계 개편 : (現) 다양한 규제로 관리 → (改) 산출량 중심으로 관리

주요 정책	
1 TAC 기반 자원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연안어업 TAC 확대 ② TAC 운영방식 다변화 ③ 한국형 ITQ 도입 검토
2 수산자원의 회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감소·고갈 어종 관리·강화 ②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 ③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3 수산자원 조사·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수산자원 조사 강화 ②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 ③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강화
4 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바다숲 조성 확대 및 블루카본 인증기술 개발 ② 광역형 산란·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
5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문화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도 개선 ②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산 ③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낚시 관리 선진화 ④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
V. 2024년 세부 시행계획

1 총허용어획량(TAC) 기반 자원관리

1 연안어업 TAC 확대

- (꽃게) 서해 연안어업인의 주 이용자원인 꽃게의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꽃게 TAC의 적용해역 확대 검토

* 지역별 꽃게 어획량('22) : (인천) 7,473t (충남) 7,260 (전북) 3,029 (전남) 3,379

- (붉은대게) 최근 연안어업의 어획비율이 증가*하고 있는 붉은대게의 TAC 적용대상을 연안어업까지 확대 검토

* 붉은대게 어획비율(근해/연안) : ('12) 99%/1% ('17) 94/6 ('22) 87/13

2 TAC 운영방식 다변화

- (다년제) 효율적 TAC 운용을 위해 변동폭이 크지 않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어종(고등어 등)의 다년제 TAC 적용 검토

* 회유성 어종인 참다랑어의 경우 매년 TAC를 산출하지 않고 4년마다 TAC를 산출

- (어기조정) 어종별 특성과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어종별로 TAC 시행시기, 적용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검토

* 현재는 모든 어종의 TAC 어기가 7.1~6.30이나, 꽃게는 1.1~12.31까지 적용 검토

3 한국형 ITQ 도입 검토

- (도상연습) ITQ의 도입에 앞서 각 ITQ 운영모델별로 도상연습(시뮬레이션)을 통해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도출

* ITQ 도상연습 과정에서 관련 어업인, 지자체 등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수용도 제고

- (경제분석) 도상연습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사회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최대의 경제적 효용*을 도출할 수 있는 도입방안 마련

* ITQ 거래를 통한 경쟁력 강화, ITQ 매매를 통한 소득보전, ITQ 거래 수수료 활용 등

2

수산자원의 회복

1 감소·고갈 어종 관리·강화

- (자원회복) 최근 자원량이 감소·고갈하고 있는 살오징어*, 도루묵** 등의 자원회복을 위한 자원감소원인 정밀분석, 어획동향 조사 등 추진

* (살오징어) 적정 산란장 형성유무, 유생단계 생존율, 서식지 적합도 분석/예측

** (도루묵) 어획동향, 생태학적 특성, 비어업인의 산란기 유어행위 실태 등 조사

- (맞춤형 관리) 회복대상종을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중점연구종·모니터링종·해역관심종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관리(총 25종)

* '24년 중점연구종(살오징어·도루묵·주꾸미 등 8종)의 자원평가 및 '25년 회복권고안 도출

2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

- (어린물고기 보호) 연근해 해역 어린물고기 보호 통합적 권고안 도출을 위한 주요 위관장의 어린물고기 포획실태 심층 조사* 실시

* 심층조사: ('21) 동해권 → ('22) 남해권 → ('23) 서해권 → ('24) 제주권

- (잠재생산량 연구) 연근해 수산자원의 정확한 환경수용량 및 잠재생산량 산출조사로 지속가능한 자원량을 설정하여 합리적 자원관리 정책 수립 지원

* 권역별로 수산자원 생태계를 통합하여 위험도 분석 추진('24년 서해권역)

3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

- (혼획 저감조치) 혼획률이 높은 어업(트롤류, 안강망 등) 어선 감척*을 지속 추진하고, 해양포유류 혼획 정보에 대한 전자모니터링 도입 검토

* 정치망 어선을 감척대상에 포함(22.7)하고, 직권 감척 추진시 불법어선을 감척 대상으로 우선 선정('24~)

- (교육·홍보) 어업인 대상으로 고래류 혼획 저감을 위한 교육·홍보, 고래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

3 수산자원 조사·평가

1 수산자원 조사 강화

- (자원조사 확대) 근해 위주로 진행된 자원조사를 연안까지 확대해 정확한 수산자원량을 파악하여 연안어업 TAC 확대 토대 마련
 - * (기존) 근해 500개 정점 → (확대) 총 900개 정점(근해 500개 + 연안 400개)
- (침단·고도화) 융합기술*을 통한 주요 회유성 부어류 현존량 추정하고,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적용 확대**를 통해 조사 자료의 정밀도 제고
 - * 과학어탐, 연속어란채집, 환경DNA분석 기술접목으로 주요 부어류 변동 모니터링
 - ** 내만으로 산란·회유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 내 행동 특성 연속 모니터링

2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

- (평가단계 상향) 어종별 생태특성(연령 등) 및 수협조업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평가단계 상향*(4단계 이상) 적용
 - * 평가단계 적용목표 : (연령구조모델) 1~3단계, (단위노력당어획량모델) 4단계
- (외부검증 확대) 수산자원 조사·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 검증*을 확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 - *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내·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

3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강화

- (수산과학조사선 건조) 노후 조사선을 침단장비를 탑재한 선박으로 대체*하여('24. 1척 준공), 해양생태계 변동에 따른 자원조사 역량 강화
 - * 수산자원조사선 건조(누적) : ('22) 준공 4, 건조 중 3척→('23) 준공 5, 건조 중 2척→('24) 준공 6, 건조 중 1척
- (TAC 인프라 확대) 연근해 어업 생산에 대한 철저한 조업정보 확인 및 어획물 조사 강화 등을 위한 조사원 및 현장 사무소 확충
 - * 조사원: ('24) 120명→('26) 510→('28) 900 / 사무소: ('24) 20개소→('26) 36→('28) 50

4

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

1 바다숲 조성 확대 및 블루카본 인증기술 개발

- (바다숲 조성) 환경적응력이 높은 바다숲 25.5km²(17개소, 누적 342.7km²)을 신규 조성하고, 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*
 - * (민간협력 바다숲) : '24~'27 / 국비 50%, 민간 50% / 현대차(20억원), 효성그룹(6.5억원)
(민간기업 참여) : ('24) 2개 기업 → ('25~'27) 5개 기업 → ('28~'30) 10개 기업
- (블루카본) 바다숲(잘피 등) 탄소흡수량 연구* 등 탄소상쇄 기반 구축으로 탄소상쇄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IPCC 블루카본 인증 국가제안서 제출('24)
 - * (바다숲 탄소흡수량 조사) 당초해조류(동해·제주) → 확대잘피(서해·남해) 추가, 전해역 확대

2 광역형 산란·서식장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

- (광역형 전환) 현행 소형·연안 중심의 조성사업*을 생태계 기능별로 연계한 “(가칭)생태계 기반 광역형 수산자원조성” 전략** 수립('24.下)
 - * (조성현황) 바다목장('06~'22년) 50개소, 산란·서식장('15~'23년) 33개소(계속23, 완료10), '24년 37개소(계속23, 완료14)
 - ** (주요방향) 광역(시·도)단위의 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해 광역범위·多품종 자원조성
- (사후관리) 조성해역의 유지관리 기준* 마련하고, 정보 DB화를 통한 종합정보도 구축('24.上) 및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방안 수립('24.下)
 - * (관리사각지대) 30년 초과인공어초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, 가능유지율 70% 미만 인공어초만 관리대상

3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

- (허용행위 확대) 오·폐수 유입차단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낮을 경우, 제한행위의 허용 확대를 적극 검토
 - * 「장사법」에 따라 허가된 분묘 설치, 소수력 발전 시설 설치 등
- (합리적 구역조정) 지역 경제 활성화,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현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추진
 - * 수보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구역조정 등을 추진

1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제도 개선

- (지역특성 반영)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제한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,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 추진
 - *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지자체 배포('24.1)

<자치조례 주요내용>

- 포획·채취 기준(포획·채취 제한되는 어구·방법, 장소·시기, 수산자원의 종류·크기·수량 등)
- 포획·채취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(수산자원 특성·자원량,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)
- (비어업인 포획·채취 캠페인)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합리적인 레저 활동 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과 상생하는 캠페인 추진(연중)
 - * 우리부 자체 제작한 '착한 해루질 캠페인' 영상을 활용하여 우리부 유튜브 및 지자체 홍보 추진

2 자율관리어업 참여 확산

- (어선어업 참여 확대) 어선어업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, 지원을 통해 어선어업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유도 강화
 - * 연합 어선어업공동체 설립(10개소), 평가 기준 정비, 지원사업 발굴·지원
- (평가·지원 개선) 자율관리어업 비활동 공동체 정비를 추진하고,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체계 전환*과 육성사업비 지원방식 개편** 추진
 - * (평가) 수산자원관리 성과중심 평가를 위한 「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관한 규정」 개정 (사업비)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개편하고, 공모형 자율관리어업 컨설팅, 리더쉽 교육 등 도입
- (우수공동체 육성) 지역별로 공동체 교육·컨설팅을 강화하고,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공동체 선정·지원*을 확대
 - * 우수공동체(평가점수 600점 이상) : ('22) 391개소 → ('23) 326 → ('24) 383
- (공동체 협력 강화) 어업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'자율관리어업 워크숍' 개최하고, 선진공동체 정보교류 및 교육·홍보 활성화
 - * 권역별(동해권, 서해권, 남해권, 전남권, 제주권)로 추진하여 워크숍 효과 제고

③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낚시 관리 선진화

- (낚시어선 어획량 조사) 낚시 기초통계 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낚시어선의 어종별 마릿수, 무게 등 어획량 조사 추진(연중)
* (조사기간/주기/방법)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/ 매월 / 면접조사
- (낚시·여가 특구) 낚시·여가 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('24.下)
* (국정과제-73) 풍요로운 어촌, 활기찬 해양, 실천과제 7.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
- (낚시 홍보) 낚시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낚시방법, 안전수칙, 에티켓 등 동영상 시리즈 제작 및 유튜브 홍보(연 2회 이상)
* 우리부 유튜브 채널 '어선오션 TV' 및 낚시정보종합포털 '낚시누리'(www.naksinuri.kr) 업로드

④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

- (캠페인 확대)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'치어럽 캠페인'을 확대*하고, 지자체, 어업관리단 등과 합동으로 유통·판매업체에 대한 홍보 강화
* 지속가능 지역축제 개선 공모전, 온라인 소비자 참여채널 운영, 전시회 운영 등
- (소통 워크숍) 정부, 소비자단체, 전문가,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'민관 수산자원관리 협의체'를 활성화하고, 소통워크숍 개최(연 1회)
*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소비자참여 수산자원관리 추진방향 마련
- (소비자 중심) 민관 소통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참여 자원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, 소비자 주체 수산자원 보호 활동단 운영
*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생산 통제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적 수산자원 관리
- (상생환경) 국민과 어업인이 상생하는 해루질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·교육 등 강화하고, 어촌계·동호회의 인식 제고 등 추진
* (어업인) 수협 홍보매체 활용 어촌계 대상 교육, (동호회) 주요 동호회 대상 현장간담회

VI. 투·융자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별	재원별	연차별 투자액		
		2022	2023	2024
총 계	계	131,741	120,555	112,703
	국 비	121,241	110,055	102,203
	융자	10,500	10,500	10,500
1. TAC(총허용어획량) 기반 자원관리	소 계	14,953	15,139	15,240
	국 비	4,453	4,639	4,740
	융자금	10,500	10,500	10,500
2.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	소 계	2,062	2,187	1,998
	국 비	2,062	2,187	1,998
3.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·평가	소 계	28,531	16,185	15,468
	국 비	28,531	16,185	15,468
4. 연근해 서식·생태환경 개선	소 계	76,907	77,353	71,002
	국 비	76,907	77,353	71,002
5.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	소 계	9,288	9,691	8,995
	국 비	9,288	9,691	8,995